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 속도

전남에 통합대학교 형태의 국립의과대학을 신속히 신설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차원의 정책 논의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올랐다.

전남도는 17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도지사와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은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이 회동을 갖고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책실장-도지사-목포·순천대 총장 회동...신설 추진 합의

대학통합 승인·27년 의대 개교, 대학병원 설립 힘 모으기로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이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을 공유하며,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하나의 통합대학교로 운영하되, 캠퍼스별 총

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유연한 통합'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통합 이후에도 캠퍼스별 총장을 임명해 각 지역 특성과 역할을 살리는 운영 방식이 논의됐다.

의과대학 설립 일정과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2027학년도에 개교하고, 신설 의과대

학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 설립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울러 이번 통합대학 설립이 국내 최초 '글로벌대학 통합'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해, 통합대학교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이끄는 거점 국립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의 연계 추진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대통령실과 전남도는 앞으로도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라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엄마의 마지막 출근길, 커피차로 응원해요” 17일 오전 광주 서구청 앞 광장에 33년 여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조은숙 세무1과장을 축하·응원하기 위해 자녀들이 깜짝 선물로 마련한 커피차가 등장했다. 이날 동료 조 과장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은 함께 커피와 차를 마시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공식절차 추진 본격화

예비후보지 발표 후 주민투표 거쳐 부지 확정

광주시 “2027년 초까지 이전부지 확정 기대”

광주 군 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이 17일 정부 주도로 전격 합의되면서, 수년간 담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전 논의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교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군 공항 이전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오른 것”이라며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 시와 전남도, 무안군, 정부가 각각 수행해야 할 역할이 명확히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된 6자 협의체 테스크포스(TF)는 일회성 논의의 기구가 아니라, 합의 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상시 실무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출발점은 국방부

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국방부 장관이 이를 발표할 경우 무안군은 즉시 예비 이전 후보지 지위를 얻게 된다.

이날 무안군이 참석한 6자 협의체에서 무안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무안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정해진 셈이다.

이후 단계부터는 무안군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군 공항 이전 계획을 수립해 이전계획심의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하고, 이 과정에서 무안군은 공식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전 계획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군

방부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해 심의를 거친 뒤 무안군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게 된다. 무안군은 주민투표를 통해 군 공항 유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지 의향을 제출한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 주민투표는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광주시는 이 같은 절차가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국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최종 부지 확정까지 약 3년 11개월이 걸렸다”며 “이번 사례는 사전 논의와 합의가 상당 부분이 이뤄진 만큼 절차를 1년 안팎으로 압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늦어도 2027년 초까지 최종 이전 부지 확정을 기대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우선 진행되며, 민

간공항 이전 논의는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시를 요청하게 된다. 무안군은 주민투표를 통해 군 공항 유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지 의향을 제출한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 주민투표는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무안으로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광주시는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게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는 총 5조 7000억원이 투입되며, 새 군 공항 건설과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을 포함해 전체 사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국장은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다”며 “총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지자체가 함께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대표도서관 작업계획서·허가서 확인 안 돼”

정준호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 내용 확인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관련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작업계획서와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서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현장은 사고 이전 총 7회 안전 점검을 받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정준호 의원 (사진) 이 17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으며,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제에 의한 작업 허가의 경우도 지난해 10월28일 제출 이후 서류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안전점검 이력도 의식지방 국토관리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자체1, 합동3)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 총 7회의 안전점검이 시행됐지만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안전점검은 사고와 직접 연관된 공법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 경위로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육상바다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 구간 타설을 완료하고 펌프카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 타설된 콘크리트가 붕괴하면서 타설층 바닥 미장을 진행하던 작업자 1인과 하부층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3인이 매몰(붕괴면적 : 약 960㎡)”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은 “구조물의 붕괴



는 X3~X4, Y2열 BOX GIRDER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Y2열의 붕괴와 함께 Y1열 부재도 함께 무너지면서 하부층의 슬래브도 파단돼 총 2개 층의 슬래브가 붕괴됐고, 붕괴가 발생한 층의 기둥체 사이 크는 1000X1000X20X20로 내부는 철근이나 철골부재 없이 콘크리트 채움으로 시공되는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토부 장관은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조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미래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간이었고 완공 후 사고가 났으면 참사가 났을 것”이라며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건축공사는 1개 동 지하 2층~2층, 연면적 1만1286㎡ 규모로 건립 중이었으며, 공사 금액은 207억원, 공사 기간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사고 시점 기준 공정률은 약 71%였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국토부, 조류 충돌 전담인력·평가제 도입 등 안전 강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 위험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안전 확보와 조류 충돌 예방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안국제공항 사고 원인으로

로 지목된 공항 내 구조물과 조류 충돌 위험 관리 미흡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과 각종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되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 구역은 활주로 양 끝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인접한 착륙대 및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시설물의 파손 기준은 항공기 중량과 이동 속도, 구조물의 강도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도, 내년 미래에너지 핵심 신산업사업 집중

AI 기반 분산전력망 등 재생에너지 관련 국비 1979억원 확보

전력계통 포화 해소·창업 생태계 조성·해상풍력 부품 국산화

전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K-그리드 인제창업밸리 조성,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등 총 1979억원의 미래에너지 핵심 사업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국비 확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전남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망·해상풍력·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사업은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1196억원(총사업비 1조300억원), K-그리드 인제창업밸리 245억원(총사업비 490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원(총사업비 495억원),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55억원(총사업비 425억원),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93억원(총사업비 300억원),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베어링) 시험센터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50억원) 등이다.

전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육성’ 사업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접속지연 완화,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K-그리드 인제·창업밸리 조성, 한국형 해양합성중로 개발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2027년 완공 예정인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도 국비가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된다.

이 사업들은 국내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미래에너지 핵심사업 국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1동 조감도

전남·광주를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청년 인재와 에너지 스타트업이 집적되는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영남 대불국가산업단지에는 해상풍력 발전기 핵심부품인 피치·요 베어링 내구성 시험센터가 구축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1면 ‘김대중 공항’서 계속

통합공항의 위상 재정립 과정에서 ‘지역이 공유하는 상징’을 공항 이름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자연스럽게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는 의미다.

다만 리스크도 분명하다. 전직 대통령 이름을 공공 인프라에 붙이는 순간, ‘추모·기념’과 ‘정치화’가 충돌할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박정희 공항’ 논란

처럼, 공항 명칭이 안전·재가동 논의의 본질을 덮고 진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립대 통합 과정에서 ‘김대중대학교’ 제안이 정치 논리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경험도, 명칭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항 기능 회복과 안전 신뢰 재구축이라는 본질 과제 위에, 명칭 논쟁이 또 다른 갈등 축으로 번지지 않도록하려면 공론화 방식과 절차 설계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